

통독 사례를 통한 남북 경제 통합 방안

김 영 윤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골드만삭스가 2050년의 통일한국의 모습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 통합을 이룬 통일한국은 G-7 국가의 반열에 들어가 국민총생산 면에서 프랑스나 독일을 앞지르고 심지어 일본까지도 따라잡을 것으로 보았다. 이의 기본적인 추동력은 북한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과 남한의 자본과 기술에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경제 통합을 위해 준비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이는 동서독의 급진적 경제 통합이 가져다 준 교훈을 통해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무엇보다 남북한 경제 통합은 통합 전 경제협력을 통해 쌍방간의 경제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 지역에 특별경제개방지역이 다수 형성되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남북간 생산 요소의 이동을 추진하고, 물류 운송 및 통신 시설의 개통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북한의 국가독점 생산체제의 부분적 해체와 함께, 내부 개혁과 대외개방,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이 이루어져 북한 경제의 국제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동시에 경제협력 사안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생산의 표준화, 생산제품의 해외시장 공동 진출이 요구된다. 이 같은 단계가 심화되면 북한에 생산요소 시장이 형성되고, 협력 사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화폐 단일화 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경제 통합의 효율성과 성과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북한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 가격 자유화로 나가는 과정이 필히 동반되어야 하며, 생산 수단의 소유 주체와 관련된 개선 조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업 운영과 채산성 제고를 위한 조치도 단행될 필요가 있다. 생산 기여도에 따른 분배가 물질적 인센티브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보다 과감한 국제경제체제에의 참여가 필요하다.

남북 경제 통합은 한민족 전체 삶의 질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의한 통일은 통일 과정에서는 물론, 통일 이후에도 심각한 부작용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통일을 이루는 것 못지않게 통일에 이르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 과정이 통합이다. 각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감으로써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을 때, 통일 과정에서의 부작용 최소화는 물론, 통일한국의 잠재적 역량이 최대화할 수 있다. 경제 교류와 협력이 많을수록, 다양화할수록 남북한의 이질성은 그만큼 더 줄어들 것이다. 상호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다. 남북한 통합은 이와 같은 과정을 반드시 포괄해야 한다. 통일에 이르는 단계로서의 경제 통합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문제 제기 : 골드만삭스가 보는 남북한 경제 통합의 미래

「골드만삭스」가 남북한 경제 통합의 미래를 밝게 내다보고 있다. 최근에 발행한 글로벌 경제보고서(Global Economic Report 188)에서 「골드만삭스」는 2050년의 통일한국이 G-7 국가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 때쯤 되면 통일한국의 경제력은 국민총생산면에서 프랑스나 독일을 앞지르고 심지어 일본까지도 따라잡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 통합의 형태는 동서독과 같이 급진적인 것이 아닌 점진적이며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한 북한의 경제 잠재력이 성장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골드만삭스」는 2013년부터 북한의 경제가 전환기 경제로 들어서면, 15년이 되는 2027년에 북한의 국민소득은 남한의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본다. 특히 눈에 띄이는 점은 이 과정에서 남한으로부터 국민소득의 1%가 북한 지역으로 이전된다면, 총생산의 절반에 달하는 시기는 13년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풍부하고 경쟁력 있는 인적 자본, 높은 교육 수준과 잘 훈련되어 있으며, 강한 근로 의식을 가진 수많은 젊은 노동력이 남한의 기술과 자본과의 결합은 북한 경제 성장의 추동력이다. 여기에는 북한에 존재하는 풍부한 자연 자원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북한의 지하자원 분야가 상당한 부를 축적시키고, 이를 통한 투자 재원의 확보가 가능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규모는 전체 국민 소득의 15%에 달할 것으로 보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 경제는 2013부터 2027년까지 15년 동안 평균 7%의 경제성장, 그 다음 10년 동안은 다소 완만한 경제성장을 보일 것이나, 2038년부터 2050년까지 경제가 성숙, 전체 기간 동안 평균 5.5%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초기 15년에는 연 11%의 통화가치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며, 이를 통해 남한 경제를 추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일 비용도 점진적 통합 과정에서 추진되는 남북한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 무리 없이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북한에 유연한 정권이 유지됨으로써 체제전환기 동안 인플레이션을 잘 조절

하고 북한의 화폐가 남한에 잘 연계된 신축적인 통화 정책이 추진되어 가격의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재정 정책의 중점을 사회기반 시설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두어야 할 것도 강조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이와 같은 미래 전망은 우리를 고무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은 그리 단순하지 않을 것이다. 되도록 경제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 남북한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먼저 남북한 경제 통합의 의미와 효과를 살펴보고 동서독의 경제 통합을 들여다 본 후, 남북한 경제 통합 전략, 경제 통합을 위한 남북경협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남북한 경제 통합의 의미와 형태

경제 통합의 의미

경제 통합(Economic Integration)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2국 혹은 그 이상의 국가가 동맹을 결성, 상호간에 무역 자유화를 비롯, 재정·금융·통화 등의 경제 정책면에서 상호협력을 도모하여 개별 경제 주체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보다 큰 하나의 공동경제단위를 이룩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발라사(B. Balassa)는 경제 통합을 그 대상이 되는 국가 상호간의 내부 결속도와 이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차별 정도에 따라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화폐 및 경제동맹(Monetary & Economic Union) 및 완전한 통합(Complete Integration)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있다.¹⁾

1) Bela Balassa,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Fourth Impression, 1973).

자유무역지대란 통합에 참가한 각 가맹국 상호간에 상품이동에 대한 무역제한 조치를 철폐함으로써 역내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외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인 관세정책 및 무역제한조치를 취하는 형태의 경제 통합체를 의미한다. 관세동맹은 자유무역지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역외공통관세(common external tariff)를 부과하는 형태의 경제결합체다. 가맹국 상호간 상품의 자유 이동이 보장되나 역외 비가맹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공통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공동시장은 가맹국 상호간 재화뿐만 아니라 노동 및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자유 이동이 보장되나, 역외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공통의 관세 제도를 택하고 있는 통합체다. 화폐 및 경제동맹은 공동시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역내 상품 및 생산 요소의 자유 이동과 역외공통관세 외에도 각 가맹국간 경제 정책의 조정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경제 통합체를 지칭한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통합은 가맹국 상호간에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하여 그 기구로 하여금 각 가맹국의 모든 사회·경제 정책을 조정·통합·관리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경제 통합 형태 중 가장 완벽한 형태의 통합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 상태의 각국은 사실상 하나의 단일 경제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하나, 재정·통화 정책을 위시한 공동의 경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고유의 경제적 주권이 초국가적인 기구로 이양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경제 통합의 마지막 단계인 완전한 통합을 정치적 통합을 포함하는 단계로 파악하고 있다.

경제 통합의 형태

경제 통합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형태에 따라 동서독의 경우처럼 정치적인 통일이 합의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급진적인 형태와 유럽연합(EU)처럼 경제적인 이익을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상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정치적인 통합까지 추구하는 점진적인 형태로 대별될 수 있다. 또한 경제 통합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형태별로 제도적(institutional)인 유형과 기능적(functional) 유형으로도 구분될

수 있다. 제도적 통합은 각 경제 주체들간 통합의 조건과 형태를 결정·합의하여 통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경제 통합이라고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를 의미한다. 반면, 기능적 형태는 경제 통합을 제도적인 결합 장치와는 관계없이 개별 국가간 산업이 서로 연계되고 상호 보완 관계가 이루어져 경제적으로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 형태를 말한다. 중·대만간의 경제 관계나,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독일과 네덜란드 및 독일과 오스트리아간의 경제 관계를 지칭할 수 있겠다.

동서독 경제 통합 사례와 시사점

동서독은 급진적인 경제 통합을 이루어낸 전형적인 사례다. 1990년 7월 1일 제 1차 「동서독 화폐·경제·사회 통합에 관한 국가 조약」이 발효됨으로써 일시에 단일경제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동독 사회주의 경제 질서가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로 한꺼번에 전환하게 되었던 것이다. 경제 통합을 위해 가장 먼저 취해진 조치는 통화 단일화였다. 1990년 7월 1일부터 서독연방은행이 발행하는 서독 마르크화가 동독의 정식 화폐로 통용되었으며, 정식 지급 및 결제 수단이 되었다. 국유자산의 사유화가 이루어지고 동독 지역 예산을 서독의 예산 제도에 따라 바꾸었으며, 서독의 조세 제도가 동독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경제 통합이 화폐 통합을 통해 일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합을 위한 제도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했다. 화폐 통합에 따른 동독 중앙은행의 위상과 역할, 화폐 단일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의 문제, 예를 들어 통화량, 화폐 및 금융시장의 조정, 인플레이션, 국제수지상의 문제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 거기에다 국경 개방을 통한 노동력의 자유 이동이 이루어짐으로써 동독 지역 근로자들의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동독의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향상을 크게 앞지름으로써 구동독 지역 재화의 가격이 일시에 상승하게 되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동독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동독기업의 경쟁력 상실은 동독 산업의 생산저하로 이어져 동독기업을 파산시키고 실업자

를 증대시키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일이 이루어졌던 과정인 1990년 7월에서 1991년 2월 사이 동독지역의 산업 생산지수는 1/3 이하로 떨어졌으며, 노동생산성도 이에 버금가는 하락 현상을 나타내었다.

구동독 경제에 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것은 화폐 통합이 이루어질 때, 임금, 연금, 장학금 및 임대차 소득 등이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적정 교환율이라고 제시되었던 4.4:1 보다 훨씬 높은 1:1로 이루어졌던 점이다. 구동독 주민들은 당시 동독 화폐로 받았던 임금이나 연금을 똑같은 금액의 서독 마르크로 받을 수 있었다. 1:1의 교환은 동독 주민들의 소득 규모와 구매력을 상승시켜 경제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를 유발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었으나, 산업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임금이 한꺼번에 거의 5배(당시 평균 환율 4.4:1을 고려) 정도 상승함으로써 동독 경제의 경쟁력을 마비시켰던 것이다. 이는 곧바로 동독기업의 도산과 함께 실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업자의 증대는 다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져 통일 후 양 지역 주민간의 이질감을 증대에 일조를 했다.

동·서독의 급진적인 경제 통합은 정치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경제 통합은 화폐 통합 이전 동독기업을 국가로부터 독립된 기업으로 전환시키고, 국가보조금을 대폭 감축시키기 위한 가격 및 조세개혁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루어져야 했다. 그러나 당시 동서독이 직면했던 급진적 통일의 당위성이라는 정치적 상황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했다. 독일 정부는 교환율의 화폐 통합과 급진적인 경제 통합으로 우선 동독주민의 대량 이주를 막고 비교적 단시간 내 동서독간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경제적인 격차해소는 궁극적으로 동독 경제가 먼저 호전되어야만 가능한 문제였다. 동독의 생산성이 증대되고, 생산시설 근대화와 함께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이 이루어져야만 해소될 수 있는 문제였다.

동서독의 급진적인 화폐·경제 통합은 결과적으로 통일 초기 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던 서독의 경제가 오히려 구동독 지역의 경제를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동시에 서독에게도 경제 통합에 따르는 단기간에 엄청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동서독의 경우 비록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었지만 경제 통합은 기본적으로 경제논리에 충실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다. 다름 아닌 점진적 경제 통합, 먼저 동독의 경제가 시장화를 이룬 다음, 서독의 경제와 통합하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는 점이다.

남북한 경제 통합을 위한 경제 협력 방안

남북한 경제 통합은 남북한간의 경제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 지역에 특별경제개방지역이 다수 형성된다는 전제 하에 남북한간 생산 요소의 제한적 이동을 추진하고, 생산 분업의 활성화와 물류 운송 및 통신시설의 개통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북한의 국가독점 생산체제의 부분적 해체와 함께, 내적 개혁 및 대외개방, 국제금융 기구의 가입이 이루어지고 남북한간 생산 요소의 이동이 확대되는 형태를 띠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경제 협력 사안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생산의 표준화, 생산제품의 해외시장 공동 진출이 활성화가 요구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북한에 생산 요소 시장이 형성되고, 생산 요소의 자유 이동과 협력 사업의 고도화, 화폐 단일화가 추진되고 남북한간 국토 개발이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생산 분야 협력

남북 경제를 통합하는 효율적 방안의 하나는 먼저 북한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남한의 경제 발전 모형을 북한 지역에 접목시키면서 국제 경쟁력이 높은 산업의 특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먼저 접근해야 할 분야는 생산 분야다. 생산 분야에서는 첫째 노동 집약 및 자연 자원을

가공, 수출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경제특구를 남한 시장이나 중국, 동남아 시장 수출용 생산기지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한이 1960~70년대 추진했던 것처럼 북한 노동력을 섬유, 의류, 신발, 가죽, 가방, 완구, 목재, 출판, 인쇄 등 노동 집약적 분야와 전기·전자 제품 조립 등 경공업 분야의 임가공 상품 생산에 집중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유망하다. 그 밖에 농수산물 분야의 제품들을 북한 지역에서 공동 생산하여 남한으로 반입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할 필요가 있다. 특용 작물을 「계약재배」하거나 「위탁재배」하는 동시에 비료, 농약, 농업용 비닐, 농기구 등 영농 자재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북한의 자연자원도 남북한 협력의 유망 분야가 될 수 있다. 북한의 철, 금, 은, 동, 연, 아연, 니켈, 티타늄, 석탄, 중석, 석회석, 흑연, 고령토, 마그네사이트 등의 자원들을 가공 수출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자연자원 개발을 위한 설비를 반출, 공동 개발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형태의 남북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내수시장을 겨냥한 생산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요구된다. 비누, 제지, 신발, 의료용품 등을 비롯, 설탕, 제과, 제빵, 조미료(장류) 및 기타 농수산물 가공 등 식료품 부문이 이에 해당된다. 중·장기적으로는 TV 등 가전제품, 자전거, 시계, 카메라, 재봉틀, 화장품, 카세트, 주방기기와 같은 내구재 등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는 기술 집약 부문에서 공동 협력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먼저 산업 구조 조정 차원에서 조선, 자동차, 철강·금속, 기계, 화학 등 선도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은 북한 경제 발전 차원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비료, 정유나 저기술 범용 제품, 정밀도가 낮은 산업용 기계, 농업용 기계와 같은 기계제작 분야의 협력이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 분야에서는 북한의 유휴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선박 해체에서 선박용 엔진과 같은 고급 산업용 기계 생산 분야에서의 협력, 철강

산업 분야에서는 남한에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조강류 설비를 북한으로 이전, 남한 내 제품 구조를 고부가가치화 하는 한편, 북한의 설비를 새롭게 재구축하는 협력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산업 구조 조정 차원의 협력에 이어 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을 통해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발전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한 바, 초기에는 임가공 협력을 통한 컴퓨터, 반도체 및 TV와 같은 노동 집약적 가전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하고, 중기적으로는 무선통신 서비스 사업이나 정보·통신 분야의 단순 설계용역 분야, 장기적으로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통신 분야의 경우에는 남북한 정보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북한의 유선 통신망과 무선통신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북한의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고, 점차 첨단 통신장비 생산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별 경제 협력

남북한 경제 통합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경제특구를 남북 경제 협력의 거점으로 활용, 경제특구의 개발 효과를 북한 특구 배후지 및 기타 지역으로 파급시켜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다음 북한의 경제를 남한 경제와 연계하여 남북한 동시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분, 남북경협 사업을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개발 거점 지역과 타 지역과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즉, 북한의 특구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협력 거점을 개발한 후, 이를 동·서해 양대축으로 점진·개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해축은 동해선을 따라 금강산-통천·원산(함흥)-나진·선봉(청진) 지역으로 연결하고, 서해축은 경의선을 따라 개성-남포(평양)-신의주 지역으로 연결, 철도·도로 연결, 전력·통신 공급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유효할 것이다. 특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 협력 사업을 고려, 개성공업단지는 복합 단지로 개발, 남북 협력 사업의 전초 기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강산 지역은 국제적인 관광단지로 개발, 설악산 지역과의 연계를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관광특구 내 자유로운 이동을 포함, 관광여건 개선, 휴양·관광·레포츠를 포괄하는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육성할 필요가 있다. 신의주 지역은 동북 3성을 비롯, 중국경제와의 협력창구로서 대외개방의 거점으로 육성, 물류단지와 경공업 수출 단지로 중점 개발하고 중국 「단둥」지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라·선지역은 경공업 및 관광중심으로 개발, 러시아 진출을 위한 국제무역기지로 육성하고, 평양·남포지역은 첨단기술산업을 중심으로 특성화하되, 북한의 개혁·개방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북한지역 경제의 중추권역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북한 경제거점지역을 남한과 연계하는 것이다. 우선 북한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존의 주요 공업지구들을 거점지역으로 개발하여 집적 효과를 추구하되, 불균형 개발이 되지 않도록 산업별 입지요인과 생산요소적 특성, 환경과 국토균형발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기존의 남한 산업단지와 해안축을 중심으로 연결, 내륙과 동서로 잇는 X자형 또는 격자형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로써 목포-군장-개성-평양-신의주를 연결되는 남북한 서해안축을 환황해경제권으로 지정, 정보통신, 수송, 첨단기술, 중추 기능의 확충과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부로 개발하고, 부산-포항-동해-원산-함흥-청진을 연결하는 동해안 산업축은 환동해경제권으로 지정, 기초 소재형 산업, 조선 및 자연 자원 활용 산업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남한의 교통망 체계에 북한과 연결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남북한 연계를 위한 우선 복원 대상 구간으로서 도로는 이미 건설 완료된 문산-판문점-개성을 잇는 국도 1호선, 동해안의 간성과 장전을 연결하는 국도 7호선의 개통과 함께, 철원-평강의 국도 3호선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교통 수요에 따라 국도 5, 31, 43호선을 연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가 있다. 철도의 경우는 현재 완료된 개성-판문점-문산을 연결하는 경의선과 철원-평강-북계를 연결하는 경원선을 우선 복구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북한 내부의 운송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남북교류의 활성화와 북한 경제의 회복 과정에서는 동북아 및 유러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의 중요성이 매우 커질 것이다. 특히, 수출시장으로서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중국 및 러시아와 육로를 통한 직접 교역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들 나라와 연결되는 철도망의 구축은 큰 의미를 갖게 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남북한의 산업을 동북아 지역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한반도는 동북아 지역의 대륙과 해양을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확보하고 있어 북한의 경제거점지역과 동북아 주변 지역을 겨냥한 경제협력을 추진할 경우, 북한의 산업 경쟁력 제고는 물론, 남북한간의 산업구조조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북·중 국경지대가 대륙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잠재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 동북부 지역에는 하얼빈-대련 철도를 축으로 주요산업이 입지하고 있으며, 특히 심양, 장춘, 하얼빈, 대련 등은 석유화학, 기계, 야금, 전자 등의 '첨단산업개발구'로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극소전자공학, 신소재, 생명공학 등 미래성장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한편, 중국 동북 3성의 역사, 문화·관광자원과 한반도의 자연자원을 연계한 종합관광개발, 압록강과 두만강의 수자원을 공동 활용 및 러시아 극동의 목재, 어업, 석유, 가스 개발 중심의 협력사업도 유망할 것이다. 사할린·캄차카의 대륙붕과 이르쿠츠크의 석유·천연가스 개발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공동협력사업으로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북·중 국경지대에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바이칼-아무르철도(BAM), 몽골통과철도(TMGR), 만주통과철도(TMR) 등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존재하고 있어 북한 지역의 대외개방과 주변국들과의 상호교류·협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신의주, 만포, 혜산, 회령, 두만강을 잇는 한·만주국경축을 중심으로 경공업 및 북방자원 가공산

업의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밖에 북한의 동서연해지역도 대륙과 해양을 연결해 주는 양호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나진·선봉지역은 기존의 제철, 제강, 기계화학 등 중공업과 함께 러시아의 원료를 들여와 가공하여 대외 수출할 수 있는 경공업 및 첨단산업 육성의 적지로 평가된다. 따라서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를 중심으로 러시아 경제특구, 일본의 서북부 지역과 연결,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외 동해의 함흥-홍남, 원산, 서해의 남포-송림, 해주 그리고 압록강 어귀의 신도도 중요 협력거점이 될 수 있으며, 금강산과 원산도 관광 자원 개발과 함께, 남북 공동어로 활동, 연안해저자원개발 등 자원의 공동 활용 가능성이 높다.

경제 통합을 위한 북한의 과제

남북 경제 통합의 효율성과 성과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북한 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가격 자유화로 나가는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보다 진전시켜야 할 것이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자유화 조치와는 괴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가격체제를 정상화하고 극심한 가격질서 문란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나름대로의 처방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일부 공산품을 시작으로 가격자유화 조치를 단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 품목에 적용하는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생산수단의 소유주체와 관련된 개선조치를 대폭 개편·전환할 필요가 있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확대·발전과 함께, 먼저 개인 서비스 분야의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조치로 연결시키고, 타 분야 생산수산의 사적 소유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 운영과 채산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1998년 북한 개정 헌법은 기업관리의 합리화를 위해 독립채산제 강화, 경제적 공간의 올바

른 이용, 생산성 제고 및 품질관리 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기업의 독립채산제 실시 및 원가·가격·수익성 등 '경제적 공간'의 올바른 이용을 규정함으로써(제33조), 기업관리에서 새로운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놓고 있다. 특히, 경제관리에서 원가(cost), 가격(price), 수익성(profitability) 등을 고려한다는 문항을 추가하고 있어 앞으로 이와 같은 방향으로 과감한 정책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생산 기여도에 따른 분배가 물질적 인센티브제로 직결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보다 과감한 국제경제체제에의 참여를 통한 개방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나진·선봉 특구, 개성공단,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이외에도 남포, 원산 보세가공무역지대, 청진, 신의주 등에도 경제특구를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

남북한 경제 통합은 남북경제의 동질화와 평준화에 그 목표가 있다. 남북 경제 통합은 통일을 위해 한민족 전체 삶의 질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무력에 의한 통일이나 북한의 급변사태에 의한 통일은 통일과정에서는 물론, 통일 이후에도 심각한 부작용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우리에게선 통일을 이루는 것 못지 않게 통일에 이르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 과정이 통합이다. 각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심화시켜 나감으로써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을 때, 통일과정에서의 부작용 최소화는 물론, 통일한국의 잠재적 역량을 최대할 수 있다. 남북한 통합은 이와 같은 과정을 포괄해야 한다.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남북한 쌍방을 하나로 묶는 수단이자 통합의 원동력이다. 경제 교류와 협력이 많을수록, 또한 다양화할수록 남북한의 이질성은 그만큼 더 줄어들며, 상호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통일에 이르는 경제 통합의 단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統**